

매매춘 밀집지역에서 매춘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인천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소장 홍미영)를 비롯해 서울

부분을 빼고는 실효성이 없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실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지난 61년 매매춘에 대해 엄격한 금지주의를 표방하며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그간 매춘여성을

여성에 대한 중간착취구조에 대한 단속 강화 ▲전문적이고 현실성있는 매춘여성 사회복귀 프로그램 마련 ▲에이즈 및 성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기생관광, 룸싸롱, 구인광고를 통한 매매춘 유인 행위 등 매매춘을 조장하는 퇴폐향락산

96.3.8

매춘여성 압박하는 법집행 안된다

매매춘 밀집지역 여성단체 등 우려 표명

용산, 미아리, 천호동 등지와 경기도 의정부, 송탄 등 매매춘 밀집지역에서 매춘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막달레나의 집, 두레방, 사마리아의 집, 참사랑쉼터, 쏘나의 집 등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여성인권회, 매매춘문제 해결연구회 등 9개 단체는 1월 6일 발효된 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쌍벌규정을 강화한

처벌하는데에만 이용돼 왔을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나아가 "개정법 또한 쌍벌규정이 강화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매춘 여성의 사회복귀에 대한 제반시설과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중간착취구조와 관련해서도 모호한 규정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매춘

업체계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뇌물수수 경관에 대한 처벌 및 감시체계 마련, 포주와 조직폭력배 처벌, 매춘여성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의무화, 현실적인 직업기술교육프로그램 실시, 매춘밀집지역 내 전문상담기관 설립 및 전문상담원 배치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